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원환 한국판뉴딜
		배 포 일	2021. 6. 21.(월)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항만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정규삼, 사무관 김호택 ·☎ (044) 200-5791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 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중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개 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항만운영협약 개요

□ (추진배경) '16년 한진해운 사태시 항만용역업체(줄잡이·고박) 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등으로 수출입화물의 수송 차질 발생

- 항만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마비시 물류가 멈추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추진

※ 국정과제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제번호 80-3)】

- 전시, 사변 또는 해운업체의 파산 등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 (추진경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19.1.15. 공포, '20.1.16. 시행)

□ (추진방법) 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 무역항 항만서비스 업종별 등록대비 10% 이내(도선은 10~20%이내)

- 비상사태(전시, 대형선사 도산, 재난 등) 발생시 협약업체를 투입하여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

□ (협약체결 대상 업종) 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 업종

□ (협약체결 항만)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관리무역항은 제도 도입 및 안정화 이후 적용여부 검토

□ (협약체결 기간) '20.1.1~'21.12.31(2년)

□ (의무·지원)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인센티브(항만시설사용료 감면)를 부여 받음

□ (협약체결 절차)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자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참고 2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자일 것

가)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한 기간

나)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

